

##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옥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선임연구원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는 첫째,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과 투자 협력 두 분야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1~98년까지의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정치적 사건들은 남북간 교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투자 협력 분야에서는 정치적 사건들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치적 요인이 투자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 관계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1994년 10월 북미간제네바합의의 타결은 투자 협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행사하였다. 한편,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던 정치적 사건들이 투자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1994년 3월 '서울 불바다' 위협 사건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6년 10월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제네바 합의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본 분석 결과가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먼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경협 정책의 추진은 현실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같은 정경 분리 원칙이 갖는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라는 용어 자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본 연구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정경 분리 원칙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는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커다란 기조 아래에서 정치적 요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 분리'라는 용어는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대치되는 것이다.

## 머리말

**O** T 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남북 경협 추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연계 및 분리에 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남북 경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 논리에 의해 모든 경제 논리가 희생당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대북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논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정경 분리'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문제와 같은 중대한 안보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남북 경협 정책의 추진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 논리의 우위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남북 경협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치 우위-경제 종속' 주장이다.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의 기초가 포용 정책으로 정해지면서, 남북 경협 추진에 있어서도 '정경 분리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 및 연계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북한 잠수정의 동해안 출현으로 인해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은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사일로 오인되었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북한, 아직도 동해안에 잠수정을 보내는 북한, 이런 북한에게 한우를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정부도 정경 분리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고 말았다. 한우 지원은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었고, 결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 또한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대북 경협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남북 경협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및 검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같은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설사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인상적이고 비체계적인 자료인 경우가 많으며, 과학적 분석에 바탕한 체계적인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이처럼 실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정책 논의에서 올바른,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책 건의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고의 1차적 목적

은 대북 경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과연 정치적으로 요인은 남북 경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협 가운데서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본격적인 투자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또한 정치적 요인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자료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특히 '정경 분리'라는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과연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은 현실성을 갖는 정책인가?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경 분리' 원칙이 가능한 것인가? 이와 더불어, 이 용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사건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추세 분석(trend analysis)을 통한 연구인데,<sup>1)</sup> 이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남북 경협이 어떠한 추세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또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검증이 어려우며, 따라서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객관성과 과학성이 부족한 매우 단순한 기법이다.

본 고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매우 폭 넓게 사용되는 '박스-젠킨스 시계열 분석' (Box-Jenkins Time Series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 방법은 해당 시계열 자료가 기본적으로 무작위(random)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가정에 바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과 요인 등을 발견해내는 기법이다. 이 분석 방법의 기본 모형은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자기 회귀(Auto-Regressive: AR) 과정, 이동 평균(Moving Average: MA) 과정, 확률 보행(Random Walk) 혹은 통합(Integrated: I) 과정의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sup>2)</sup>

1) 남북 경협에 대한 추세 분석으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장원태(1996, 12),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 경협의 특징", 「월간 통일경제」.

이러한 기본 ARIMA 모형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분석 기법의 하나가 개입(Intervention) 모형이다. 이 기법은 ARIMA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시계열에 특정 사건(Intervention)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전후의 시계열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그 사건이 시계열의 진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남북 경제 협력은 크게 교역과 투자 협력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분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교역 모형'과 '투자 협력 모형' 두 가지를 만들고자 한다. 교역 모형에 있어서의 종속 변수는 '남북한 간 교역량'(반입+반출)이며, 투자 협력에 있어서 종속 변수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수'이다.<sup>3)</sup> 이 두 변수에 대한 월별 자료는 통일원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1991년 1월부터 1998년 8월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시계열 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사건, 즉 개입 변수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지난 1994년 3월 발생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한의 NPT 탈퇴 및 사찰 거부 등으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對북한 제재 조치가 논의되는 등 북한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남북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킴은 물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1994년 10월의 북미간제네바합의(Geneva Agreement)의 타결이다. 이는 북한 핵위기의 잠정적 타결을 의미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서,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직후 우리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변수는 남북 경협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2) ARIMA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하라. Box, George E., and Gwilym M. Jenkins(1970),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San Francisco: Holden-Day; McCleary, Richard, and Richard A. Hay, Jr.(1980), *Applied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3) 물론 투자 협력의 가장 적절한 지표는 실제 투자 혹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진 건수 혹은 투자액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투자 협력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선책으로서 경제 관련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변수는 '대북 투자 협력에 대한 남한 기업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네바 합의라는 외부적 요인과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 변화라는 대내적 요인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둘 가운데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1996년 10월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를 군사적 긴장 상태로까지 몰고 갔으며, 그에 따라 남북 경협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도 남북 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사건 이후의 시계열 자료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차후에 자료가 좀 더 많아지면, 이 변수를 포함하는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계열 분석

### ARIMA 모형

본 고의 주 목적은 정치적 사건이라는 개입 변수가 교역 및 투자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역 및 투자 협력 두 종속 변수에 대한 일변량(univari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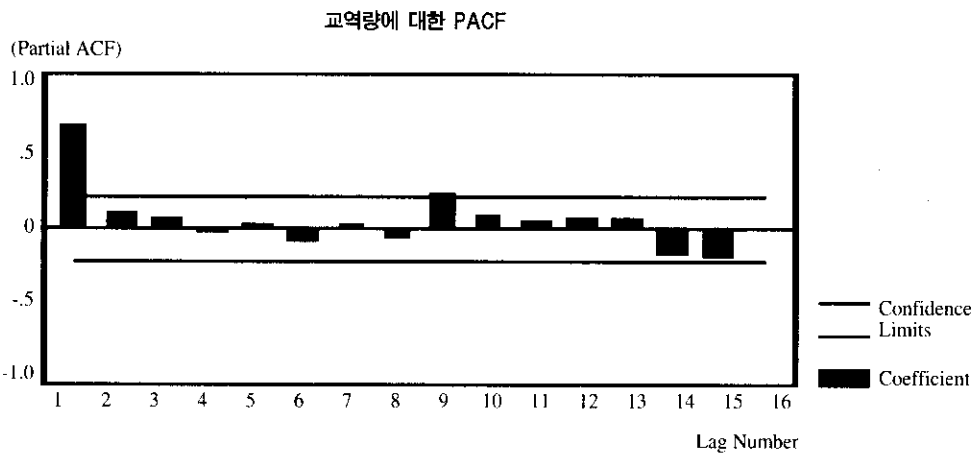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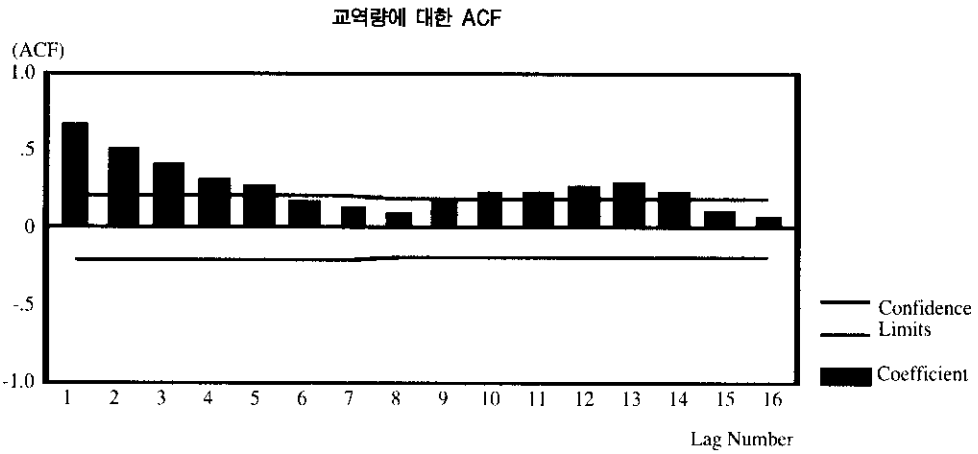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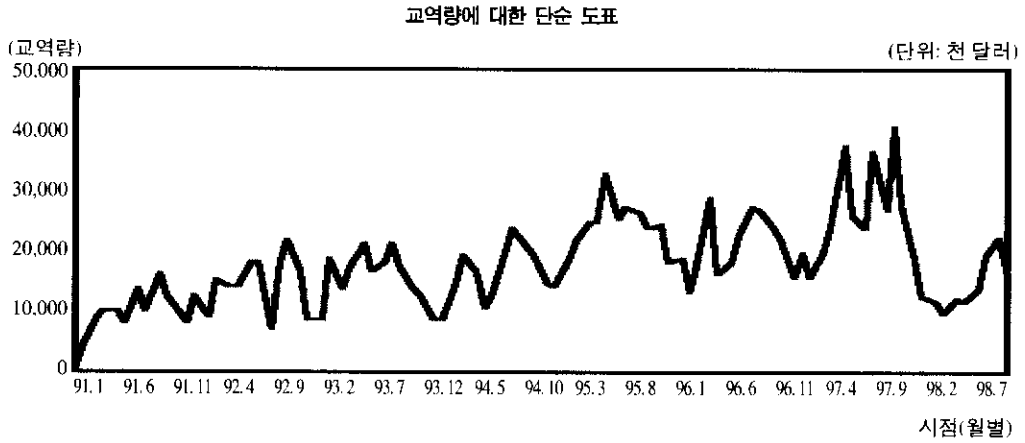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개입 변수를 추가하기 전에 이 두 시계열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 구축은 ARIMA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 ○ 교역량 ARIMA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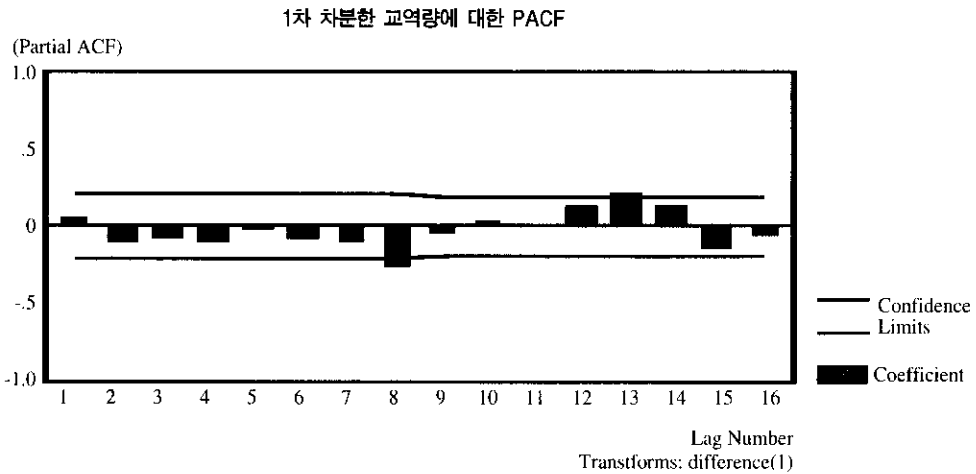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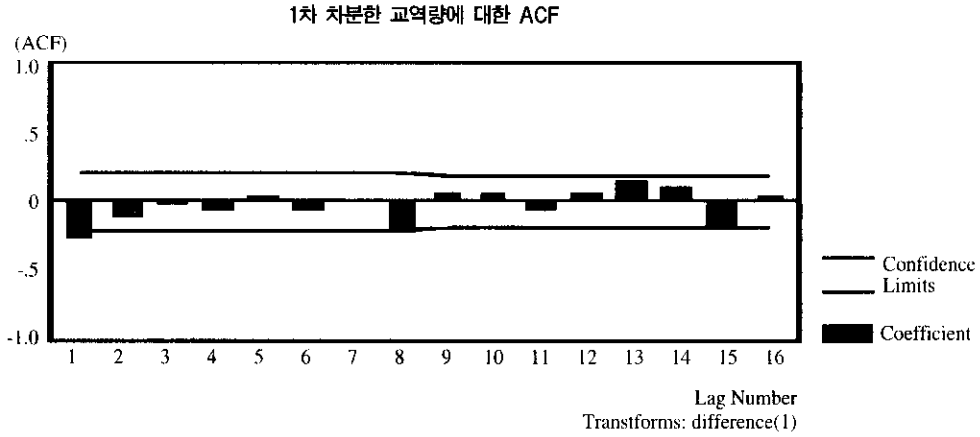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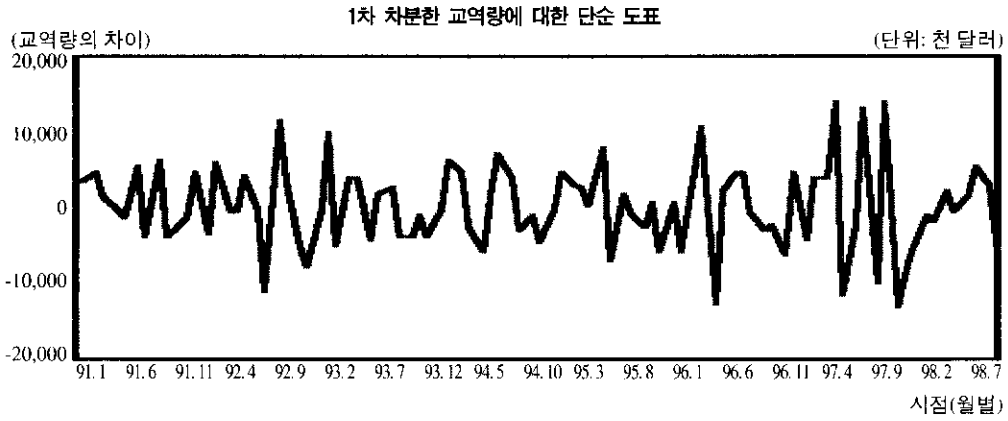
교역 변수에 대한 ARIMA 분석을 한 결과, 남북한간의 교역량은 확률 보행(Random Walk) 과정과 이동 평균(MA)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의 단순 도표, 그리고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 및 부분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를 살펴보면, 일단 교역량은 확률 보행 과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다시 말하면, 이 시계열 자료는 정상성(stationarity)을 갖고 있지 못하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바꾸어 말하면, 확률 보행 과정을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계열을 1차 차분(Differencing)하면 된다. 〈그림 2〉는 1차 차분한 시계열의 단순 도표와 ACF 및 PACF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 도표를 보면, 1차 차분으로 인해 정상성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CF와 PACF의 유형으로 보아, 1차

<그림 1> 교역량 시계열 진단



〈그림 2〉 1차 차분한 교역량 시계열 진단



이동 평균(MA)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역 모형은 전체적으로 IMA(1, 1)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 B) \text{교역}_t = (1 - \theta_1 B) a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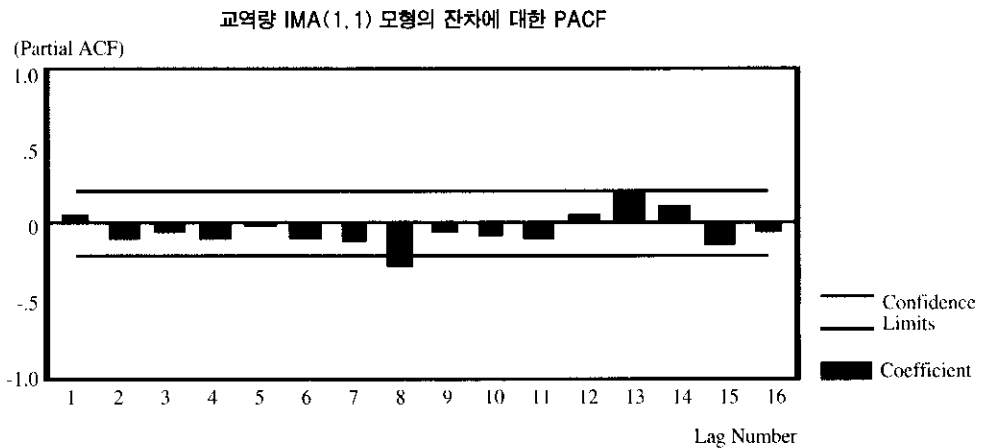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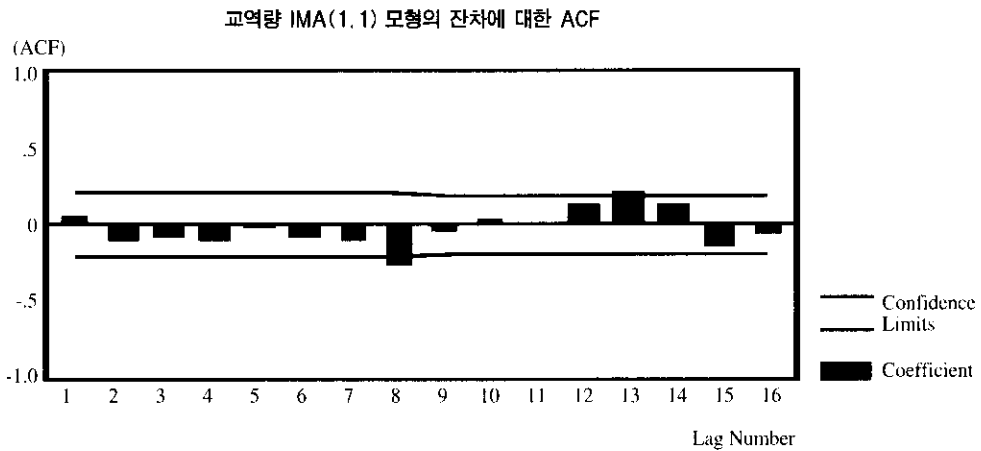
교역: 교역량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의미함.

B: Backshift 연산 기호로, 시간 단위가 하나 뒤로 돌아감을 의미함.

$\theta_1$ : 1차 이동평균 계수를 의미함.

$a_t$ : 백색 잡음 과정(white noise process)을 의미함.

〈그림 3〉 교역량 IMA(1, 1) 모형의 잔차 분석





〈표 1〉 교역량 IMA(1, 1) 모형의 분석 결과

잔차수(Number of residuals)	91		
표준오차(Standard error)	5404.1979		
Log likelihood	-910.83263		
AIC	1823.6653		
SBC	1826.1761		
	Beta(계수)	T-Ratio	Significance (유의수준)
MA(1)	.36433183	3.7007527	.00036985

교역량에 대한 IMA(1, 1)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MA(1) 계수인  $\theta_1$ 의 추정치는 0.364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 모형의 잔차(residuals)가 과연 백색 잡음 과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잔차에 대한 ACF와 PACF를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함수 모두 아무런 유형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계수가 신뢰 구간(confidence limits)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모형의 잔차가 백색 잡음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 투자 협력 ARIMA 모형

투자 협력 변수에 대한 ARIMA 분석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해당 시계열의 단순 도표, 그리고 ACF와 PACF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정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차 자기 회귀(AR)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투자 협력 모형은 AR(1) 과정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다:

$$\text{투자 협력}_t = \phi_1 \text{투자 협력}_{t-1} + a_t$$

투자 협력<sub>t</sub>: 경제 관련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수의 시계열 자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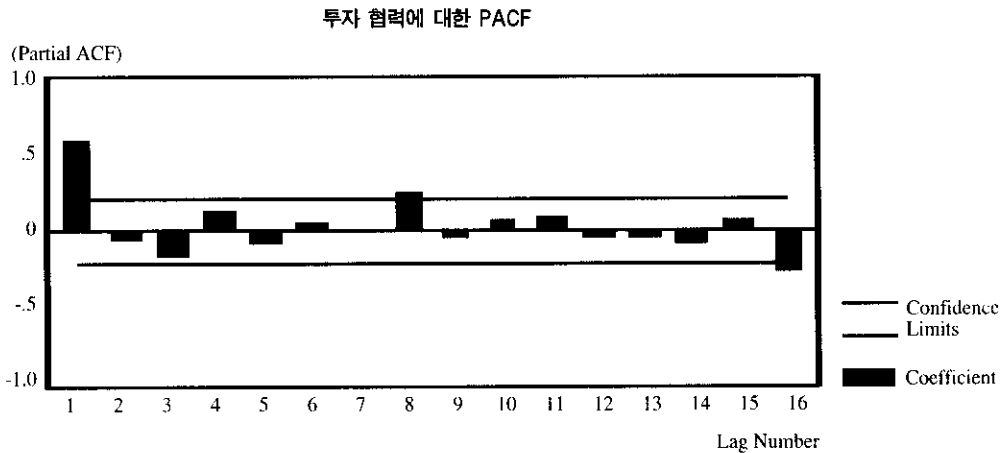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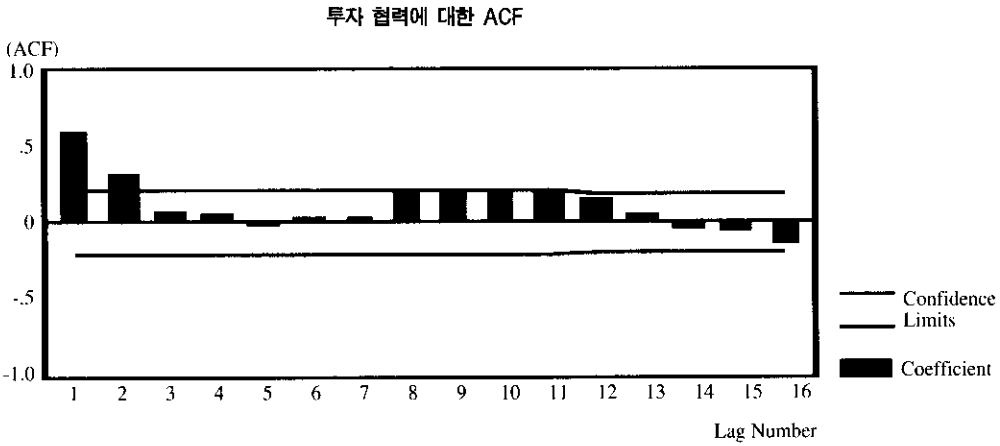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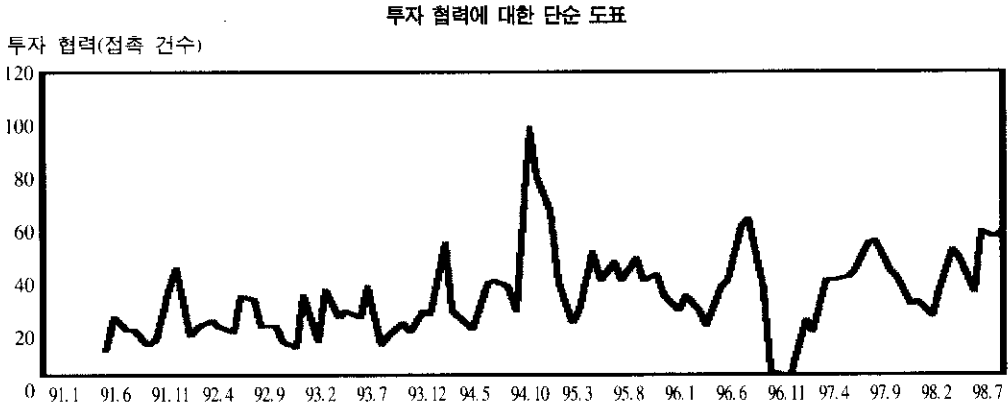
$\phi_1$ : 1차 자기 회귀 계수를 의미함.

투자 협력에 대한 AR(1)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1차 자기회귀 계수  $\phi_1$ 의 추정치는 0.91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0$ ). 또한 이 모형의 잔차에 대한 ACF 및 PACF 분석 결과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계수가 신뢰 구간 안에 위치함으로써, 잔차가 백색 잡음 과정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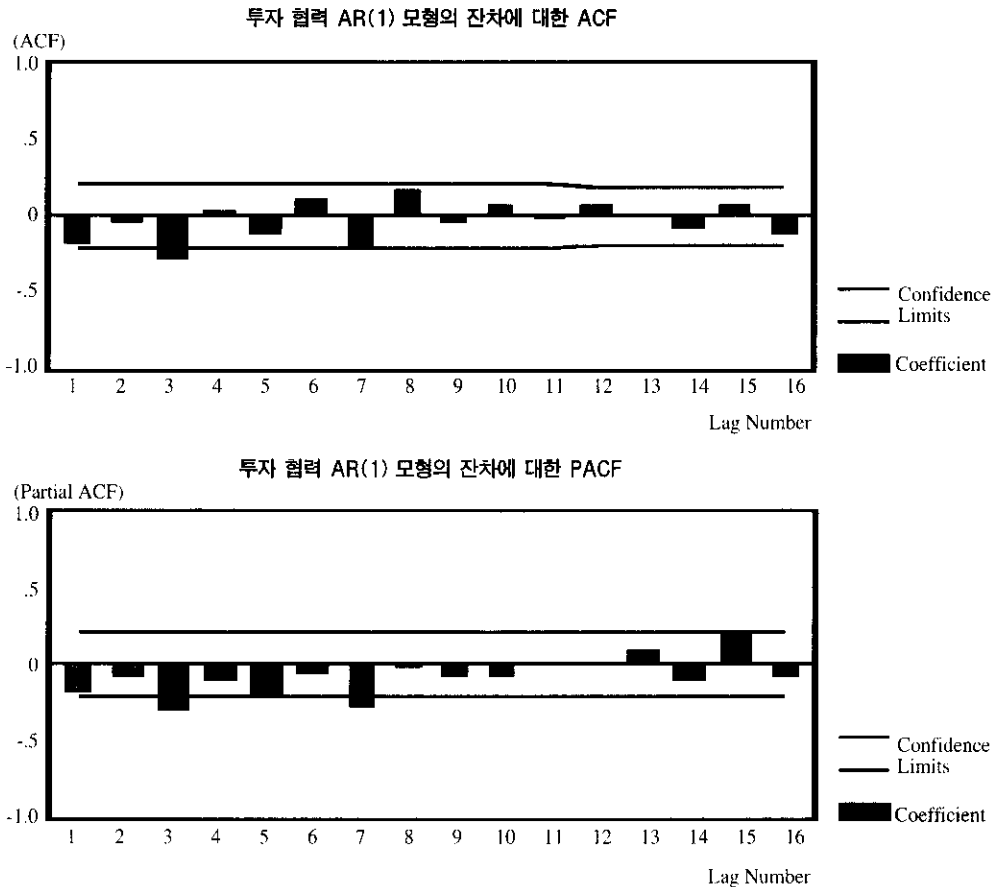
〈표 2〉 투자 협력 AR(1) 모형의 분석 결과

잔차수(Number of residuals)	86		
표준오차(Standard error)	14.673091		
Log likelihood	-353.43643		
AIC	708.87287		
SBC	711.32722		
	Beta(계수)	T-Ratio	Significance (유의수준)
AR(1)	.91565580	20.600111	.0000000

〈그림 4〉 투자 협력 시계열 진단



<그림 5> 투자 협력 AR(1) 모형의 잔차 분석



**개입(intervention) 모형**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요인들이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 ARIMA 모형에 세 가지 개입 변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s)의 형태로 추가하였다. 즉, 불바다 위협 사건을 의미하는 가변수로 '불바다', 제네바 합의를 의미하는 가변수로 '제네바', 그리고 잠수정 침투 사건을 의미

하는 가변수로 '잠수정'를 설정하였다.

이들 가변수의 값은 해당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지속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지며, 그 시점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1의 값을 갖는다(이런 경우를 Step 함수라고 부르며,  $S_t$ 로서 표현함). 반면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입 변수

의 경우는 개입 발생 시점에만 1의 가치를 가지며, 개입 발생 이전과 이후에는 0의 가치를 갖게 된다(이런 경우를 Pulse 함수라고 부르며  $P_t$ 로서 표현함).

예를 들어, 제네바라는 가변수가 해당 시계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제네바( $S_t$ )'로 표현되며, 이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기간 동안, 즉 1991년 1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0의 가치를 가지며, 1994년 1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이 변수가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제네바( $P_t$ )'로 표현되며, 이는 1994년 11월에만 1의 가치를 가지며, 그외 모든 시점에는 0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5)</sup>

### 교역에 대한 개입 모형

먼저 교역에 대한 기본 모형에 대해 이틀 세 가지 개입 변수를  $P_t$  형태로 추가하여 다음의 개입 모형을 만들었다:

$$(1 - B) \text{교역}_t = \text{불바다}(P_t) + \text{제네바}(P_t) + \text{잠수정}(P_t) + (1 - \theta_1 B) a_t$$

이 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 어느 변수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의 계수를 보면, 제네바( $P_t$ )가 -4467, 불바다( $P_t$ )가 -1671, 그리고 잠수정( $P_t$ )이 -4799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제네바( $P_t$ )의 계수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음의 부호를 띠고 있어, 이 개입 모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요인은 적어도 남북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환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설명을 잠정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1997년 11월에 발생한 IMF관리체제와 그에 따른 원화 가치의 폭락이라는 가변수, 'IMF( $P_t$ )'를 만들어 기본 모형에 추가해보았다. 새로 만들어진 개입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 B) \text{교역}_t = \text{IMF}(P_t) + (1 - \theta_1 B) a_t$$

새로운 모형의 분석 결과, 예상대로 IMF

4)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0월 중이나, 이것이 완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1월이다. 따라서 11월부터 1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다른 개입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1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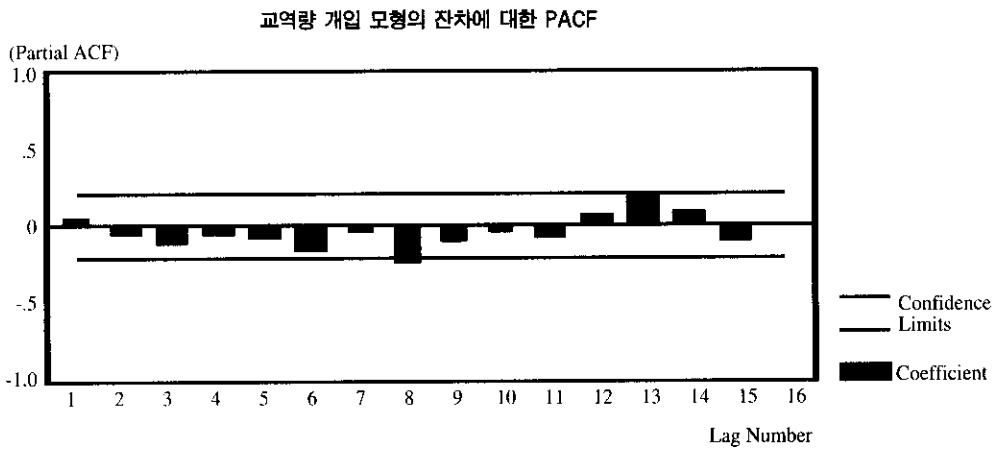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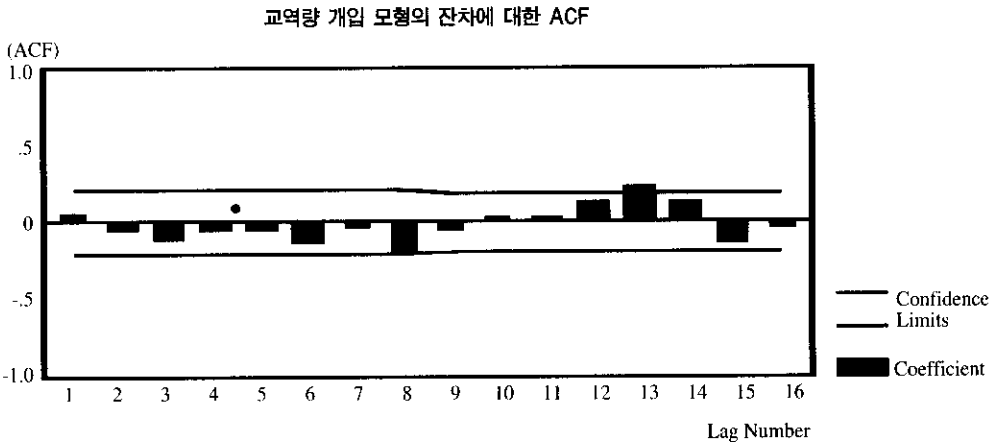
5)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입 변수는  $P_t$ 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남북 경험이라는 현상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가 고려하는 정치적 사건들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변수는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이 변수의 계수는 -16093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00$ ). 결국 정치적 사건과는 달리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사건은 남북 교역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모형의 잔차에 대한 ACF와 PACF를 검토한 결과(〈그림 6〉 참조), 별다

〈표 3〉 교역량 개입 모형의 분석 결과

잔차수(Number of residuals)	91		
표준오차(Standard error)	5110.0889		
Log likelihood	-905.34849		
AIC	1814.697		
SBC	1819.7187		
	Beta(계수)	T-Ratio	Significance (유의수준)
MA(1)	.55271	6.2312553	.00000001
IMF(P <sub>t</sub> )	-16092.50810	-3.7787997	.00028446

〈그림 6〉 교역량 개입 모형의 잔차 분석



른 유형없이 백색 잡음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투자 협력에 대한 개입 모형**

투자 협력에 대한 개입 모형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세 가지 개입 변수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개입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투자 협력}_t = \text{불바다}(P_t) + \text{제네바}(P_t) + \text{잠수정}(P_t) + \phi_1 \text{ 투자 협력}_{t-1} + a_t$$

이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복합적이었다. 먼저 제네바( $P_t$ ) 변수는 투자 협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의 계수는 47.6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0$ ). 한편, 잠수정( $P_t$ ) 변수의 영향은 제네바( $P_t$ ) 변수만큼은 크지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수의 계수는 -17.4인데, 이는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바다( $P_t$ ) 변수는 투자 협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변수의 계수는 -10에 불과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불바다( $P_t$ ) 변수를 제외하면, 투자 협력에 대한 새로운 개입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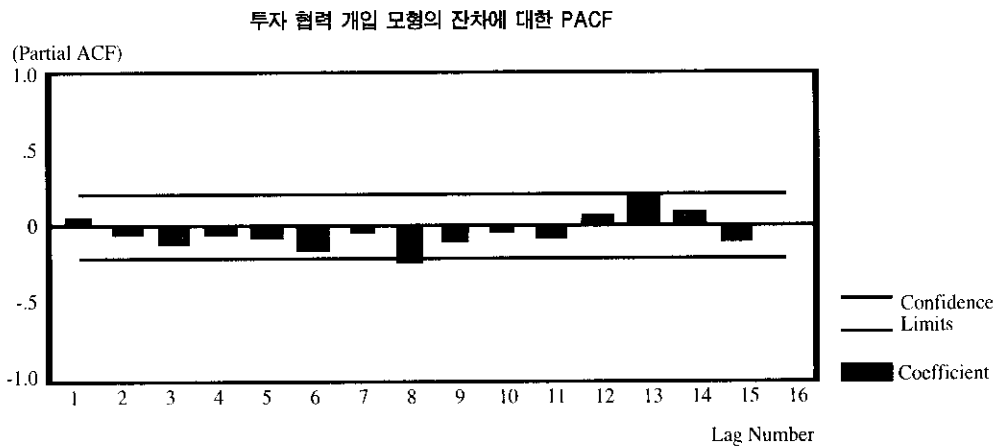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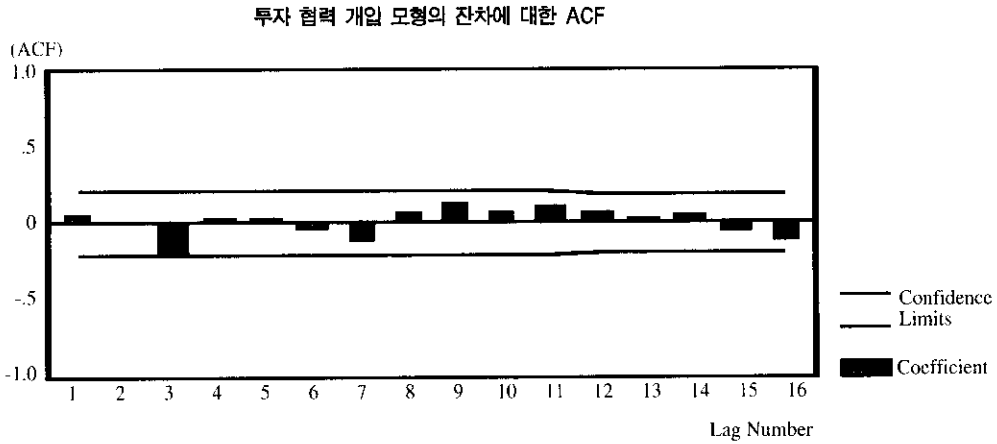
$$\text{투자 협력}_t = \text{제네바}(P_t) + \text{잠수정}(P_t) + \phi_1 \text{ 투자 협력}_{t-1} + a_t$$

이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앞서서의 모형과 거의 같다. <표 4>에 따르면, 제네바( $P_t$ ) 변수의 계수는 47.7로 약간 증가했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0$ ). 잠수정( $P_t$ ) 변수의 계수도 -17.5로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 또한 같다( $p < .1$ ).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잔차에 대한 ACF와 PACF 분석 결과는 백색 잡음 과정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런 유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계수가 신뢰 구간 안에 위치하였다(<그림 7> 참조).

**<표 4> 투자 협력 개입 모형의 분석 결과**

잔차수(Number of residuals)	86		
표준오차(Standard error)	11.996814		
Log likelihood	-333.94329		
AIC	675.88658		
SBC	685.70397		
	Beta(계수)	T-Ratio	Significance (유의수준)
AR(1)	.623594	7.2831502	.00000000
제네바( $P_t$ )	47.661191	4.6793027	.00001122
잠수정( $P_t$ )	-17.460249	-1.7142205	.09026589
상수(Constant)	31.314427	9.2746465	.00000000

〈그림 7〉 투자 협력 개입 모형의 잔차 분석



### 주요 분석 결과

본 고의 주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으로 요인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과 투자 협력 두 분야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남북 관계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정치적 사건들은 남북간 교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투자 협력 분야에서는 정치적 사건들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교역과 투자 협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교적 리스크가 큰 투자 협력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반면에, 교역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환율 등 경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던 명제들을 경험적으로 비교적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둘째, 정치적 요인이 투자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 관계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1994년 10월 북미간제네바합의의 타결은 투자 협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행사하였다. 한편,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던 정치적 사건들이 투자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1994년 3월 '서울 불바다' 위협 사건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6년 10월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제네바 합의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해석은 긍정적인 정치적 사건은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의 경험 정책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타결 직후 우리 정부는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제네바 합의 타결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경험적 근거는 약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네바 합의라는 개입 변수가 미친 영향력 가운데서 어느 만큼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경험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지난 1998년 4월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마련된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부의 대북 경험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 고의 일차적 목적은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험 정책에 대해, 특히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정경 분리 원칙의 정책적 현실성과 정경 분리라는 용어의 적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경협 정책의 추진은 현실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특정 정책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행위 주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경 분리 원칙에 의거한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북 경협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원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1년부터 우리 기업들은 정치적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꾸준히 대북 경협을 추진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역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정치적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일시적인 것이었다. 특히, 정경 분리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같은 정경 분리 원칙이 갖는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라는 용어 자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본 연구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래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 불가분성을 주장해왔으며, 대부분의 현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 또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정경 분리 정책이 정치와 경제 두 현상을 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경 분리'라는 말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도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개의치 말고 경협을 추진하라고 해도 경협의 주체인 기업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만약에 정경 분리 원칙이 대북 경협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의 철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실성이 없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정경 분리 원칙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는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커다란 기조 아래에서 정치적 요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관계 개선을 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 분리'라는 용어는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대치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造語의 습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대 언론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용어나 개념의 정의에 신경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언론에게 이러한 학자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잘못된 용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다.<sup>6)</sup> 잘못된 용어 선택은 불필요한 거부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실 정경 분리라는 용어로 인해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 불필요한 비난과 오해를 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정부가 정치·군사적 요인의 고려없이 경제 협력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는 잠수정 및 인공위성 발사 사건 발생 당시 현대그룹의 한우 지원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정경 분리'라는 용어에 스스로 얽매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

으며, 불필요한 변명을 해야만 했다. 모두 잘못된 용어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전 김대중 정부는 '햇볕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용어가 갖는 거부감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경 분리 원칙이라는 용어도 폐기 처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경 분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보다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정부의 의도 그대로, '일시적인 정치적 사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확대해나가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97**

## 참고 문헌

- 권민웅(1998. 8), "북한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 「월간 통일경제」.
- 김도경(1996), "남북한 경제 협력의 의미와 확대 방안",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25호.
- 김도태(1998. 8), "햇볕 정책은 최선의 차선책이다", 「월간 통일경제」.
- 남궁 영(1998),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과 남북한 경제 협력", 「한국정치학회

6) '정경 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이영선 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보」 322호.
- 문정인·류길재(1997), “북한체제의 변동과 대북 경제 협력의 정치·경제적 조건”, 유한수·이영선(편), 「북한 진출 기업 전략」, 오름.
- 백학순(1998. 8), “새로운 남북 관계의 초석을 놓은 대북 포용 정책”, 「월간 통일경제」.
- 신동천·이영선(1997), “남북 교류의 경제 및 교역 여건”, 유한수·이영선(편), 「북한 진출 기업 전략」, 오름.
- 유한수·이영선(편)(1997), 「북한 진출 기업 전략」, 오름.
- 이덕기, 「윈도우용 SPSS 시계열 자료 분석」, SPSS Korea 고려정보산업(주).
- 장노순(1997), “남북한 경제 협력의 정치적 의미: 현실주의 인식의 재평가”,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 장원태(1996. 12),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 경협특징”, 「월간 통일경제」.
- 정영태·유호열(1998. 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 「월간 통일경제」.
- 조동호(1997), “남북 경협의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 「타협을 위한 대결: 북한의 대외 정책과 남북 관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지만원(1998. 8), “위험한 햇볕론”, 「월간 통일경제」.
- 최 성(1998. 8),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향”, 「월간 통일경제」.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98. 9 각호),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 홍순직(1997),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Alt, James E., and K. Alec Chrystal (1983), *Political Econo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x, George E., and Gwilym M. Jenkins(1970),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San Francisco: Holden-Day.
- McCleary, Richard, and Richard A. Hay, Jr.(1980), *Applied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SPSS Inc.(1994), *SPSS Trends 6.1*.